

헝가리의 구제금융 신청 배경과 전망

강유덕 국제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오현정 국제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oh@kiep.go.kr, Tel: 3460-1267)

차 례 ● ● ●

1. 최근 헝가리의 디폴트 우려 증가
2. 헝가리의 위기요인
3. 헝가리 경제 전망

주요 내용 ● ● ●

- ▶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동유럽 국가 중 대외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받던 헝가리 경제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 외화대출 비중이 높은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 대외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받아 온바, 최근 경상수지 흑자감소와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대출 부담의 증가로 위기에 직면함.
 - 헝가리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자국으로 전이될 위험이 고조되자 예방적 성격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1년 11월 IMF와 EU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함.
- ▶ 2012년 초 헝가리 위기설이 대두된 데에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유럽의 경기침체와 디레버리징 외에도 헝가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경제정책적 요인, EU와의 정치적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헝가리는 서유럽에 대한 금융·무역 의존도가 높아 서유럽 경제가 침체될 경우 동조화되는 현상이 강하며, 국내저축률이 낮고 외채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에 민감한데, 특히 외화표시 부채의 비중이 높아 환율변동에 취약함.
 - 헝가리는 재정운영의 원칙과 감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2012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최초로 EU 지원금을 보류하는 제재안까지 추진함.
 - 최근 헝가리 정부는 ① 중앙은행법 개정, ② 신헌법 제정, ③ 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EU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IMF-EU의 예비협상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EU 경제운영의 기본방침과 상충하는 것 외에도 헝가리의 개정법안이 민주적 가치에 역행한다는 대외적 비판에 직면함.
- ▶ 조만간 IMF-EU와 헝가리 간의 구제금융 협상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여 대외갈등에 따른 불안요인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헝가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상 완만한 경기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조만간 구제금융 지원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높은 국가채무와 외화표시 부채비중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
 - EU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와 디레버리징에 대한 노출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헝가리 경제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음.

1. 최근 헝가리의 디폴트 우려 증가

■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제기되고, 서유럽에 대한 무역·금융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의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함.

- EU와 유로존은 2012년 각각 0%와 -0.3%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바 사실상 완만한 경기침체(mild recession)에 진입함.
- o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 자산감소에 따른 소비침체,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투자침체로 이어져 실물경기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 o 경기침체 시 회원국 간 동조화 현상이 강한 EU 경제의 특징 때문에 그동안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던 독일과 북유럽 국가에서도 경기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함.
- 특히 서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기둔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함.
- o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66~80%에 달할 정도로 높으며, 90% 이상의 차입을 서유럽 금융기관에서 하므로 서유럽의 경기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

■ 동유럽 국가 중 외화대출 비중이 높은 헝가리는 대외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받아 온바, 최근 경상수지 악화와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대출 부담의 증가로 인해 위기에 직면함.

- 헝가리는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 중 큰 폭의 경제침체(-6.8%)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른 국가보다 회복세가 약해 경제위기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기침체의 여파를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음.
- o 2010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이후 2011년에는 주요 교역대상국인 서유럽 국가들의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표 1. 동유럽 4개국(Visegrad Group)의 성장률 추이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체코	-4.7	2.7	0.6 (2.8)	0.2 (2.0)	-0.1 (1.2)	-0.3 (0.5)	1.7	-0.1 (-0.3)	0.2 (-0.3)	0.2 (0.0)	0.4 (0.7)	1.2
슬로바키아	-4.9	4.2	0.8 (3.4)	0.8 (3.4)	0.8 (3.2)	0.9 (3.3)	3.3	-0.3 (2.2)	0.0 (1.4)	0.2 (0.8)	0.6 (0.4)	0.0
헝가리	-6.8	1.3	0.7 (2.1)	0.1 (1.7)	0.4 (1.5)	0.3 (1.5)	1.7	-0.2 (0.7)	0.1 (0.6)	0.0 (0.3)	0.0 (0.0)	-0.1
폴란드	1.6	3.9	1.0 (4.5)	1.2 (4.6)	1.0 (4.2)	0.5 (3.8)	4.3	0.5 (3.2)	0.5 (2.4)	0.5 (1.9)	0.7 (2.1)	2.5
EU	-4.2	2.0	0.7 (2.4)	0.2 (1.7)	0.3 (1.4)	-0.3 (0.9)	1.5	-0.1 (0.1)	0.1 (-0.1)	0.3 (-0.1)	0.3 (0.4)	0.0

자료: EU 집행위원회(2012, 2).

-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 국가채무 수준(GDP 대비)이 가장 높은데, 특히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상수지 적자나 대외충격으로 인한 환율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 o EU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2009년 이후 줄어든 데 반해, 헝가리의 재정적자는 2011년 GDP 대비 6%에 이르며

국가채무 비율도 82%로 동유럽의 비유로존 회원국 평균(45%)을 크게 상회함(그림 1 참고).

- 특히 공공부채와 민간부채 모두 외화표시 비중이 높아 환율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그림 2 참고).

그림 1. 동유럽 주요국의 국가채무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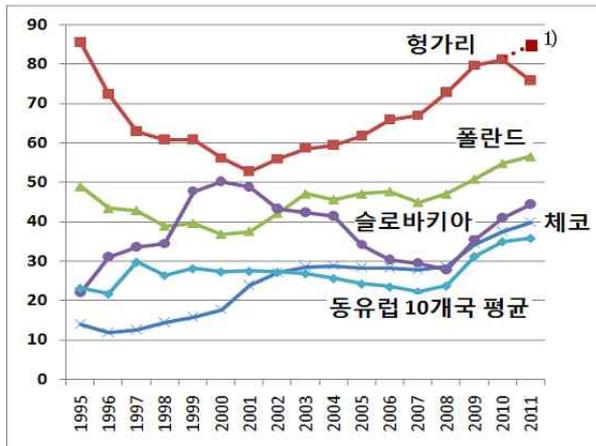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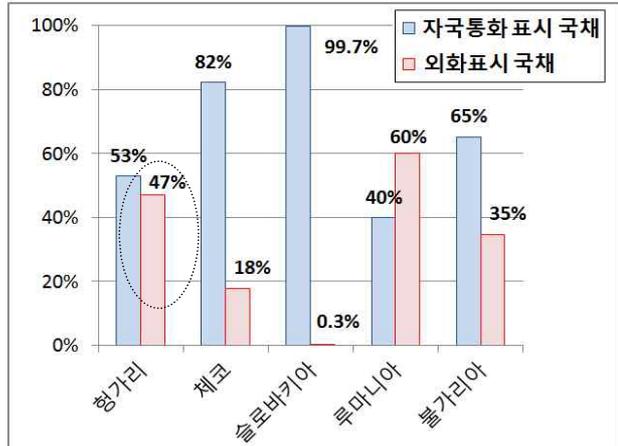


그림 2. 표시 통화별 국채비중



주: 1) 2011년 헝가리는 공식적으로는 4%의 재정흑자를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6% 적자인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채무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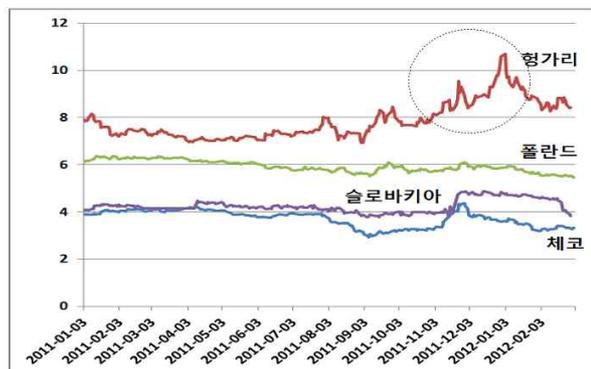
- 2011년 중 포린트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헝가리 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급상승하는 등 대외차입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함.
- 2011년 하반기 중 포린트화는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 대비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헝가리 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함.
 - ※ 2011년 중 포린트화는 유로화 대비 최고 21% 평가절하를 기록: 263.08(Forint/Euro, 2011/07/08) → 320.78(2012/01/04)
 - ※ 헝가리의 국채금리(10년 만기) 상승폭: 7.13%(2011/08/23) → 10.69%(2012/01/05)

그림 3. 헝가리 포린트화의 환율변동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4. 동유럽 주요국의 국채금리 추이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헝가리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자국으로 전이될 위험이 고조되자 예방적 성격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2011년 11월 IMF와 EU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유럽의 경기침체와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대출자금 회수(디레버리징)로 상당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 중 헝가리는 최대 규모인 251억 달러를 대기성차관의 형식으로 지원받은 바 있음.
- o 2008년 10월 헝가리 구제금융 구성: IMF(157억 달러), EU(81억 달러), 세계은행(13억 달러)
-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여론이 악화되고 IMF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이견이 확대되자 헝가리 정부는 2010년 IMF의 추가지원 권고를 거절하고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조기 중단한 바 있음.
-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자금유출 우려가 확산되자 헝가리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여 2011년 11월 예방적 유동성 지원(PLL)¹⁾을 조건으로 IMF에 구제금융(150억 유로 규모)을 재요청함.

■ IMF와는 거시경제 운영방향에 이견을 보이고, EU와는 경제정책 외에 미디어법과 신헌법 제정 등에서 마찰을 일으켜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을 겪자 헝가리의 디폴트 우려가 확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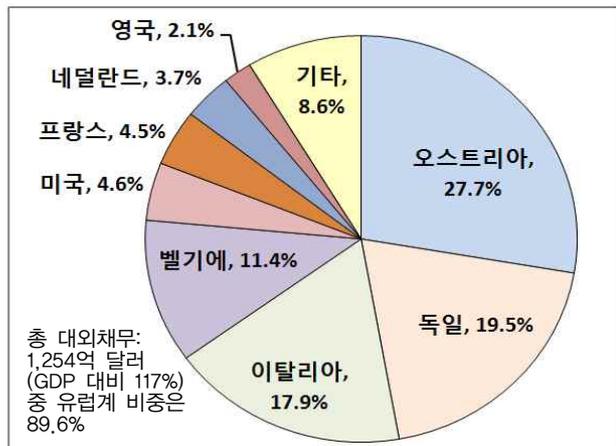
- IMF는 12월 예비협상에서 헝가리 정부의 거시경제안정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이전까지 공식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고, S&P와 Fitch는 헝가리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수준인 BB+로 강등함.
- 헝가리 정부는 2012년 1월 5일 국채입찰에서 예상(450억 포린트)보다 적은 350억 포린트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쳤으며, 발행금리 또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인 9.96%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함.
- o 헝가리의 국채는 대부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로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어 헝가리 국채가격의 하락은 유로존 은행권 유동성 문제와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음.

표 2. 헝가리의 신용등급 변화

신용등급 및 설명		신용등급		
		헝가리	동유럽 국가(현재)	
투자 적격	최고등급	AAA		
	우수	AA+		
		AA		
		AA-		
	원리금 지급능력 저하 가능성	A+		체코, 슬로바키아
		A		슬로베니아
A-		2004.1.16	폴란드	
장기적 불안요인 존재	BBB+	2005.12.6		
	BBB	2008.11.10		
	BBB-	2010.12.23	루마니아, 불가리아	
	BB+	2012.1.6		
투자 부적격	투기적 요인 존재	BB		
		BB-		

자료: Fitch.

그림 5. 채권국별 헝가리의 대외채무 비중



자료: BIS(2011. 9).

1) 예방적 유동성 지원(PLL: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은 일시적 경제위기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6개월 단기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11월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예방적 대출제도(PCL)보다 수혜대상 범위를 완화시킨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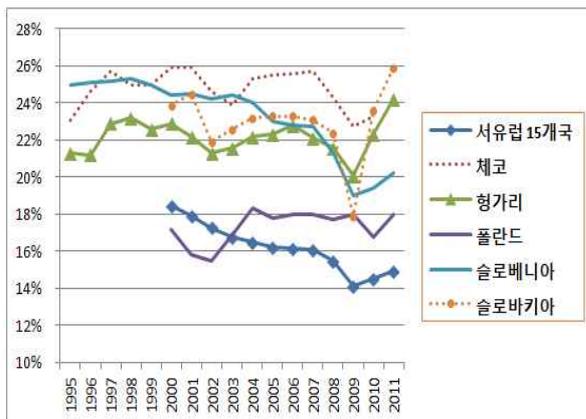
2. 헝가리의 위기요인

- 2012년 초 헝가리 위기설이 대두된 데에는 재정위기로 인한 서유럽의 경기침체와 디레버리징 외에도 헝가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경제정책적 요인, EU와의 정치적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가. 경제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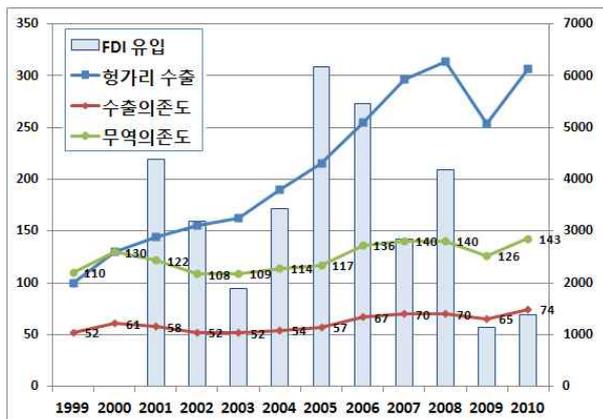
- 헝가리는 동유럽의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부문에서 서유럽 국가들과 수직적 분업체계를 갖는 것이 특징임.
 - 체제전환 이후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상당부분 외국자본의 유입에 의존하고 있음.
 - 서유럽의 탈공업화 경향과 대조적으로 동유럽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는데, 헝가리는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 국가임.
 - ※ GDP 중 제조업 비중(2011년): EU(15.4%), 영국(10.1%), 독일(22%), 헝가리(24.2%), 폴란드(18.0%),
 - 헝가리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크게 줄어든 상황임(그림 7 참고).

그림 6. GDP 중 제조업 비중 변화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7. 헝가리의 수출, 투자유입 추이



주: 1) 수출은 1999년(=100)을 기준으로 변화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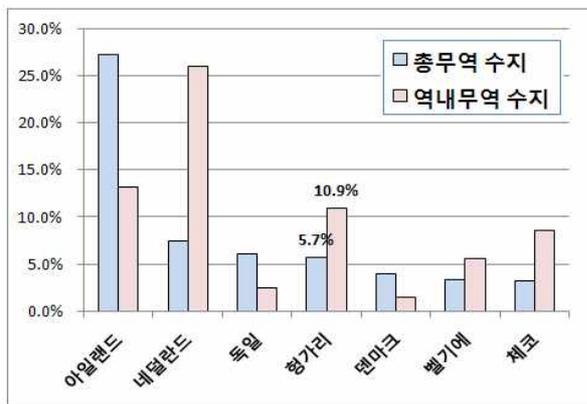
2) 수출 및 무역의존도는 수출과 무역의 GDP 대비 비중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헝가리 통계청.

- 헝가리는 서유럽에 대한 금융무역 의존도가 높아 서유럽 경제가 침체될 경우 동조화되는 현상이 강하며, 국내저축률이 낮고 외채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헝가리는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EU 역내교역 비중이 70%를 상회하며 전체 차입의 90%를 서유럽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데, EU 회원국 중 중개무역에 특화되어 있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무역개방도가 제일 높은 국가군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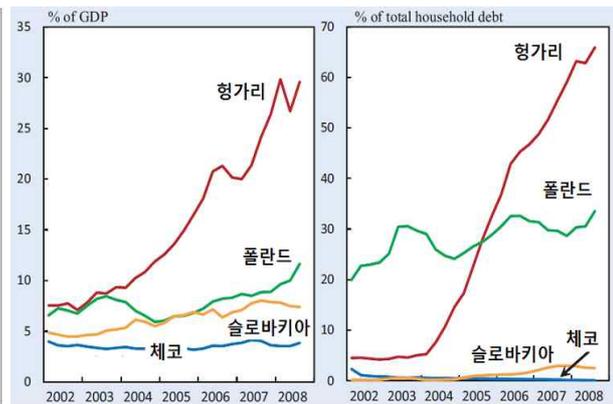
- 헝가리의 무역의존도는 141%에 달해 벨기에(172%), 슬로바키아(151%), 네덜란드(139%)와 함께 EU 내 최고 수준이며, GDP 대비 무역수지 흑자폭 역시 2010년 5.6%로 높은 수준임(그림 8 참고).
- 헝가리는 역외교역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역내교역에서 GDP의 10%를 상회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EU 내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클 수밖에 없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음.
- 헝가리 경제는 가계저축률이 낮아 해외차입과 외국인투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서유럽의 경기침체 시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취약점을 지니며, 이미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경험한 바 있음.
- 헝가리의 가계저축률은 1997~2006년 기간 중 GDP 대비 평균 10%를 상회하였으나,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8.1%로 독일(17.0%), 프랑스(15.6%)의 절반 수준이며, 동유럽 8개국 평균인 9.6%를 하회함.
- 헝가리의 총외채(공공+민간)는 GDP 대비 140% 수준으로 가계부채(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0% 이상이 스위스 프랑 표시 채무여서 환율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그림 9 참고).

그림 8. GDP 대비 무역수지 흑자비중(2010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9. 민간부채(왼쪽)와 가계부채(오른쪽) 중 외화표시 부채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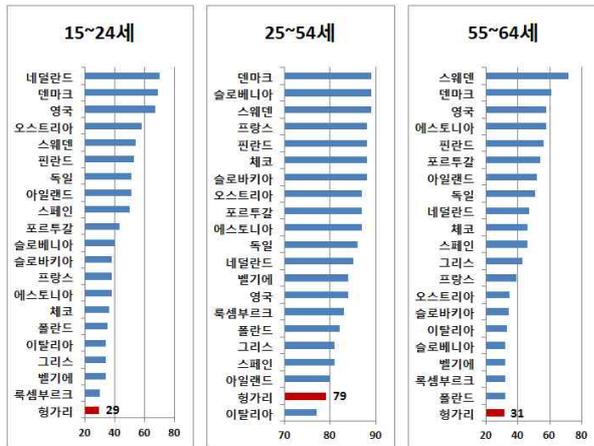


자료: 헝가리 중앙은행, Ifo(2012)에서 재인용.

■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민간부문이 위축되면서 내수진작에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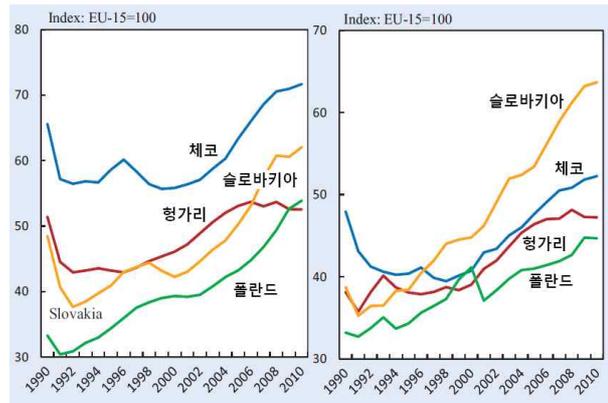
- 헝가리의 실업률은 10.9%(2012년 1월)로 EU의 평균수준(10.7%)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인데,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노동참여율이 매우 저조함.
- 노동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1990년대 민영화 과정의 구조조정과 파트타임 형태의 고용이 적다는 점, 조기 퇴직에 유리한 연금제도를 들 수 있음.
- 헝가리의 소득수준은 2005년 이후 서유럽 평균(EU 15개국)의 5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낮은 노동참여율이 이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 공공부문의 고용정책으로 실업률은 하락할 수 있으나, 세금인상, 사회보장혜택의 축소, 임금삭감,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2012~13년에도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내수약화와 노동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중장기 목표치(3.0%)보다 높은 4%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10. 연령별 노동참여율(2010년)



자료: OECD.

그림 11. 서유럽 평균 소득에 대한 수렴정도
1인당 GDP / 노동시간당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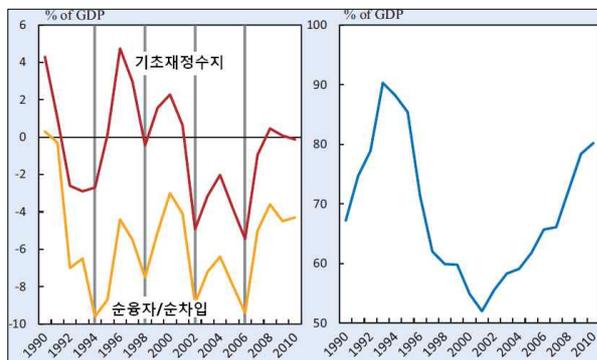


자료: Ifo(2012)에서 재인용.

나. 경제정책적 요인

- 헝가리는 2004년 EU 가입 이후 EU의 재정적자 상한선(GDP의 3%)을 위반하여 왔으며, 국가채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헝가리의 재정수지는 1990년대부터 적자가 만성화되었으며, 대규모의 민영화가 완료된 2000년대 초부터는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1990~2007년 동안 주요 선거 직전에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현상을 거듭해 왔으며 재정운영의 원칙과 감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음(그림 12 참고).
- 헝가리는 EU 회원국 중 소득수준 대비 정부지출이 가장 높은 편이며, OECD 회원국 중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일 높은 국가로 지적되어 왔음(그림 13 참고, OECD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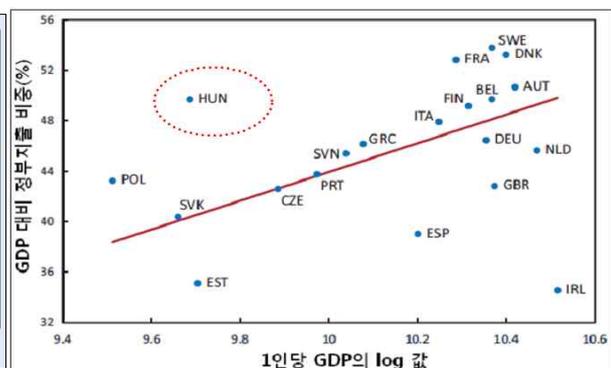
그림 12. 헝가리의 재정수지(왼쪽)와 국가채무(오른쪽) 변화



주: 수직선은 선거연도를 의미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Ifo(2012)에서 재인용

그림 13. 소득수준과 정부지출 비중 비교



자료: OECD(2011); Ifo(2012)에서 재인용

- 현 정부 출범 당시 예산위원회(Fiscal Council)를 폐지한 것이나 2011년 국가채무 상한선법 제정은 대외적 비판에 직면했던 대표적인 사례임.
- o 2005~06년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이후 헝가리 정부는 재정정책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감시기구로 예산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으나, 2010년 5월 현 정부 출범 당시 폐지시킨 바 있음.
- o 이후 EU의 비판에 직면하여 형식상 예산위원회를 부활시켰으나, 조직 및 실질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독립적인 감시기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o 2011년 헝가리 정부는 신헌법(글상자 2 참고) 제정 시 GDP 대비 50%를 국가채무 상한선으로 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경기침체 시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음.

■ 2010~11년 중 헝가리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금융세 도입, 유통·통신·에너지 부문에 대한 특별세 부과, 민간연금 국유화 등 일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비판에 직면함.

- 헝가리 정부는 2010~12년 동안 세수확대를 위해 매년 2,000억 포린트(9억 달러)의 금융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통신·에너지 업체에도 같은 성격의 특별세로 1,610억 포린트를 부과할 계획임.
- o 은행의 대출 및 포트폴리오 투자감소로 2011년 3/4분기 헝가리 은행들은 8,420억 포린트(3억 6,6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금융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금융세의 도입은 경기에 역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²⁾
- o 특히 특별세는 은행·유통·통신·에너지 등 외국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업종에 부과되어, 헝가리 경제안정 및 성장에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o 은행세 부과에 대해 EU-IMF는 정부예산을 줄이고, 공기업을 개혁하는 등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함.
- 2011년 헝가리의 재정은 형식상 흑자(GDP의 4%)이나, 이는 민간연금의 정부재정 강제편입과 같은 일회성 조치(GDP의 10%에 해당)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GDP의 6%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

■ 2012년 2월 23일 EU 경제재무장관 이사회는 재정 관련 종합법규³⁾에 근거하여 헝가리에 대한 제재절차를 추진하기로 함.

- EU 집행위원회와 경제·재무장관 이사회는 헝가리 정부가 2012년 예산안에서도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정지시(EDP) 다음 단계인 벌금부과를 위한 제재안을 추진하기 시작함.⁴⁾
- 본 제재안이 통과될 경우 헝가리는 EU가 배정한 2013년도 개발기금 중 4억 9,500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됨.

2) 2011년 12월 헝가리 정부는 포린트와 약세로 외환표시 채무에 대한 상환비용이 증가하자, 5조 포린트 규모의 외환표시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형태)에 대해 은행의 상환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여 가계 부채를 줄이고자 시도한 바 있음.

3)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스팩(Six pack rules)’ 규정은 EU 경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종합 법규임.

①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의 예방적 장치 관련 개정 법안, ② SGP의 교정적 장치 관련 개정 법안, ③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효과적 재정 감시를 위한 법안, ④ 회원국 예산제도 관련 요건에 관한 법안, ⑤ 거시경제 불균형의 예방 및 교정에 관한 법안, ⑥ 초과불균형시정절차(EIP: 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관련 유로존 회원국의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법안.

4)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위배 시 EU 집행위원회는 특별감시와 경고단계인 과대재정적자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시행하게 되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국 간의 협의를 거쳐 벌금부과와 같은 제재가 가능함.

- EU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EU 지원금을 보류하는 제재안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EU가 재정준칙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고 EU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짐.
- 2007~13년간 헝가리에 배정된 EU 개발기금은 총 253억 유로이며, 이 중 2012~13년간 배정된 기금은 82억 유로로 헝가리 GDP의 1.4%에 해당함.

다. 정치적 요인

- 최근 헝가리 정부의 신헌법 제정과 은행법 개정은 EU 경제운영의 기본방침과 상충해 EU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IMF·EU의 구제금융 협상에도 차질을 일으키고 있음.
 - IMF·EU는 헝가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중앙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2011년 12월 16일 헝가리와의 예비회담을 중단하였으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17일 헝가리 정부의 ① 중앙은행 개정법, ② 법관은퇴연령 하향조정, ③ 정보보호법 개정(데이터 보호 옵부즈맨 폐지)이 EU 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헝가리의 EU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EU법 이행강제절차(Infringement Procedure)⁵⁾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글상자 1. 헝가리에 대한 EU의 이행강제절차와 이유

- 회원국의 국내법이 EU법과 상충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EU 기능조약(TFEU) 258~260조에 의거하여 이행강제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EU법 우위의 원칙)하며, 회원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가 가능함.
- EU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중앙은행법 개정안은 ① 정부인사의 장관의 금통위 회의 참석과 금통위 의제안의 정부사전 통보, ② 정부의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급여조정권한, ③ 중앙은행 부총재 및 금통위원 증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제기됨.
 - 법관은퇴연령을 ① 하향조정(70세 → 62세)한 것은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EU 판례를 위반하는 것이며, ② 법원인사행정처를 신설하여 법원행정처장 1인이 법관인사에 대한 결정을 단독 처리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 국회산하 독립기관인 데이터 옵부즈맨을 폐지하고 법무부 부속기관으로 신설한 것과 신설된 데이터 보호기관의 장을 총리나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5) EU의 침해구제절차는 EU 조약 285조에 따라 회원국이 EU법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취하는 법적 구제절차로 세 단계로 구성됨. ① 회원국에 정보를 요구하는 EU 집행위원회의 공식통지서 발송(회원국의 답변까지 2개월 부여) → ② 회원국이 제출한 관련 정보가 불만족스럽거나 회원국이 EU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EU법 준수를 요구하는 통지서 발송(회원국에 2개월 추가기간 부여) → ③ 회원국의 불응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통상적으로 95%의 사안이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절차 이전에 해결되나, 회원국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이행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

- 진행 중인 EU법 침해구제절차는 재정준칙 위반에 대한 제재(EDF)와는 별개의 문제이나, 경기운용 방향에 대한 충돌로 해석되어 원활한 구제금융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함.
- 최근 헝가리 정부가 추진한 개혁법안들은 민주적 가치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EU와 회원국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책 일관성의 결여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위기해결 능력에 관심이 집중됨.
- 헝가리 정부는 비민주적인 법령을 수정 및 통과시킴으로써 대외관계와 국내여론이 악화되어 경제정책 수행에 차질을 겪고 있음.
 - 유럽의회 내 녹색당, 사회당계는 최근 헝가리의 정치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녹색당 계파들은 헝가리가 EU의 기본적 가치를 위반한 만큼, 헝가리의 투표권 정지 및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개진 중임.
 - EU·IMF의 구제금융 협상을 헝가리 국내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임.
- 최근 헝가리의 국가신용등급이 잇달아 하향 조정된 것은 경제위기 이외에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글상자 2. 최근 헝가리가 개정안 주요 법령

▶ 신헌법 제정(2012년 1월 1일 발효)

-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국회로 이전하고 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본권(40개)을 24개로 줄임.
- 판사 정년을 하향 조정하여 274명의 현직 판사를 조기 퇴직하도록 하고 이미 은퇴한 친정부 인사로 대체하는 법을 통과시킴.

▶ 중앙은행법 개정(2012년 1월 1일 발효)

- 2011년 12월에 개정안이 승인된 이후 유럽중앙은행(ECB)과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소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EU 규범과 상충되는 것으로 평가됨.

①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국가채무 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IMF·EU와의 재정지원 협상 대신에 헝가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약 350억 유로)를 2012년 만기도래 외채(48억 달러) 상환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외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환율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

② 은행에 대한 특별세를 도입하고 연금 자산을 다시 국유화하는 정책 실행이 가능함.

③ 중앙은행의 고위직 인사를 늘리는 법령 제정을 허용함.

- 금융통화위원을 기존의 7명에서 9명으로 증원 → 증원된 자리에 친(親)정부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현 정부여당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편법적 조치라는 비판
- 중앙은행 부총재 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지명권을 중앙은행 총재에서 총리에게로 이전 →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용이해짐.

④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PSZAF)의 잠재적 통합 근거 마련

- 중앙은행의 권한이 새로운 통합조직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

▶ 선거법: 기존의 선거법이 주요 정치 인사들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데즈당의 의석수를 최대로 유지하고자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함.

▶ 정보보호법: 정보감독기관(data ombudsman)을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둠으로써 감독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됨.

3. 헝가리 경제 전망

- IMF 구제금융과 EU의 재제절차와 관련하여 헝가리 정부는 법률을 수정하고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외갈등에 따른 불안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3월 중으로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헝가리의 구제금융 협상에 따라 재정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 강화와 경제여건 향상으로 일부 경제 불안정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 경기침체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경제성장률이 낮고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우려할 수준으로 높아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국면이 지속될 수 있음.
 - 헝가리는 2012년에도 유럽의 경기침체와 헝가리 정부의 긴축정책 지속, 높은 실업률과 소비자 신뢰 감소, 신용조건 악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적음.
 - EU에 대한 수출이 총수출의 77%를 차지하고, 디레버리징에 노출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헝가리 경제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음.
 - 헝가리 경제는 2012년 초 경기침체에 빠졌다가 2012년 후반기에 시장의 신뢰회복, 유럽의 경기개선 등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삼아 수출경쟁력 증진과 함께 과도한 역내의존도를 줄이고 재정, 금융, 노동 정책 등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 헝가리 경제는 ① 부채주도 성장(credit-led growth)과 ② 수출주도 성장(export-led growth)의 양면을 갖추고 있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GPS 국가(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와는 구분됨.
 - 재정적자 외에도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와 달리, 헝가리 경제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그러나 외화표시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점은 환율변동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하는 바, 개혁조치 없이는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
 -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둔 세계개혁 조치와 외화표시 부채 비중을 줄이고 만기를 장기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저축률과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성장전략이 필요함.
 -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중심의 경제라는 점에서 헝가리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출선 다변화 노력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시사점을 제공함. **KIEP**